

유엔개혁과 여성인권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1. 유엔은 지금 개혁 중
2. 유엔 인권시스템의 개혁과 여성인권
3. 유엔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계의 대응
4. 한국여성계의 과제

1. 유엔은 지금 개혁 중

5월 9일 한국이 유엔총회의 보조기구로 새로 신설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다. 세계 각국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유엔의 개입을 강화하게 될 인권이사회 신설은 작년부터 각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의 관심사였다. 금년 3월 유엔총회는 오랜 논의 끝에 인권이사회 신설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동 결의안은 인권이사회에 빠대만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¹⁾ 따라서 이번에 선출된 초대 이사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²⁾ 이제부터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될 인권이사회 의 실질적 초석을 놓는데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동시에 또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다.

인권이사회 신설은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개혁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사실 유엔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10년에 걸쳐 전면적인 개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2005년 밀레니엄 5주년 정상회의 이후, 개혁은 유엔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개혁의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가속화되고 있다.³⁾ 유엔개혁 프로그램은 크게 분류해서 유엔내부의 관리체계개혁,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 신설된 평화구축위원회의 업무, 경제사회이사회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논의, 인권시스템의 개편, 유엔 결의안의 전면적 재검토, 그리고 기구 간 통합성 재고 등을 포함한다.⁴⁾

이러한 유엔개혁 프로그램이 여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특히 인권기구의 개혁이 여성인권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성계의 당연한 관심

1) 유엔총회 결의안은 A/RES/60/251(2006. 3. 15)을 참고할 것(www.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 이 결의안은 신설 인권이사회가 연 3회기 이상, 10주 이상 개최할 것,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심의를 할 것, 특정 이사국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사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www.un.org/ga/60/elect/hrc을 참고할 것. 선거에 출마한 63개국의 명단과 출마국의 인권증진을 위한 자발적 공약, 선출된 47개 초대 이사국 명단이 게재되어 있다. 대륙별 배당 이사국 수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13개국, 아시아 13개국, 동유럽 6개국, 중남미 8개국, 서방 7개국. 일부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13개국 중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일본, 파키스탄에 이어 7위의 득표를 한 것을 두고 이를 한국이 인권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보다는 비동맹 국가들이 연합하여 서로 표를 몰아주는 바람에 결과가 그렇게 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아프리카는 사전 협의를 통해 아프리카에 배당된 이사국 수 만큼인 13개국만이 출마하여 모두 다 선출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3) 유엔여성지향상국(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캐롤린 하난 국장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에게 유엔개혁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4) 유엔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www.un.org/reform에 망라되어 있다. 유엔 밖의 시각에서 제작된 웹페이지는 www.reformtheun.org, 여성계의 입장은 AWID(www.awid.org)의 “UN Reform: What Does It Mean for Women’s Rights?” 을 참고할 것.

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뉴욕에 기반하고 있는 소수의 국제여성 단체들만이 이런 개혁과정을 부분적으로 모니터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일부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일이 진행되었을 뿐 각 지역이나 각국의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의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이러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개혁 프로그램이 모두 여성과 관련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관련이 깊은 인권시스템, 업무분장, 통합성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각각의 논의 과정에서 양성평등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개관하고 한국 여성계가 유엔개혁의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유엔 인권시스템의 개혁과 여성인권

지금까지 유엔의 인권시스템은 2가지 축으로 작동되어 왔다. 하나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인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중심으로 한 인권논의이다. 다른 하나는 7대 주요 국제인권협약과 그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체제이다. 그리고 이 두 분야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국은 제네바의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다. 이러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예산은 2배로 증액되었고, 실무진의 보강 등 기구적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1) 인권이사회 신설

인권위원회는 유엔창설 이후 지금까지 60년간 매년 전 세계 인권문제를 다루는 논의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연 6주간의 회기동안 주제별로 인권문제를 다루어왔다. 인권위원회는 그 산하에 인권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각 주제별 혹은 국가별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보고관 등이 40여명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NGO의 발언권도 보장되어왔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심각하게 정치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가 위원국이 되기도 하고,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⁵⁾ 또 인권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의 활동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NGO의 참여를 그대로 수용하는

5)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rengthening of the United Nations: an agenda for further change, A/57/387, 9 September 2002, p. 11.

것도 물리적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보다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인권문제가 빈곤이나 안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이었다.⁶⁾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발이나 평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 또 르완다 내전 시 발생한 것과 같은 대량학살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인권위원회를 격상시켜 총회의 보조기관으로 인권이사회를 신설한 것은 기존의 비판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런 새로운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유엔이 인권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이를 “유엔의 DNA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하였다.⁷⁾

신설된 인권이사회는 제네바에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첫 회기를 갖는다. 회의 첫 3-4일간은 고위급 회의에서 주로 이전 인권위원회의 임무, 방법, 기능, 책임 등을 검토하고 향후 인권이사회의 회기, 의제, 운영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⁸⁾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심의(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방식, 기존 특별절차의 존치여부와 그 방식, 국가인권기구와 NGO의 참여방식 등이다.

인권이사회의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 중 여성인권 차원의 관건은 향후 각국 인권상황 검토에 있어 여성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질 것인가이다. 과거 인권위원회에서는 6주간의 정기회기 중 하루 내지 하루 반 정도의 시간만이 여성인권에 할애되었다. 1994년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이 신설되어 여성폭력이라는 의제로 토론되다가,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여성인권과 여성적 관점의 통합(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ender perspective)이라는 의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 기능이 강화되는 신설 인권이사회에 여성계는 국별 인권문제 심의 시 여성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주요 인권협약과 더불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문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NGO의 의견발표에서도 여성인권이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특별보고관 등의 기존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제도를 인권이사회에서 존치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사안이다. 주제별 특별보고관 28명 중, 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이 포함되어 있다. 41명에 달

6)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A/59/2005, 21 March 2005.

7) 2005. 1. 27.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과 유엔 인권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논의 시 한 발언이다.

8) www.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 지금까지 결정된 회기는 제1차 인권이사회가 6월 19-30일, 제2차 인권이사회는 9월 11-29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하는 국가별,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현지 방문과 개인진정 접수 등의 역할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⁹⁾

세 번째로는 국가인권기구와 NGO의 참여 방식이다. 여성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패널의 보고서에서는 유엔과 시민사회와의 더 폭넓은 파트너십을 권고하고 있다.¹⁰⁾ 인권위원회에서 작동하고 있던 국가인권기구와 NGO의 참여는 보장될 것이 확실하나,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것인지는 인권이사회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협약감시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 시 NGO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기심의회에서도 NGO의 의견이 보다 더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인권의 이슈와 관점이 이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여성NGO가 효과적으로 여성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권협약감시기구 개혁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포함하여 7대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당사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각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¹¹⁾ 그러나 각 협약마다 비준국이 증가함에 따라 제출해야 할 보고서도 증가하고 이는 협약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각국 정부에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었다.¹²⁾ 정치적 의지의 부족, 또는 능력이나 자원의 부족으로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전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당사국이 상당이 있는 현실이다.

또한 각 위원회는 심의해야 할 보고서가 점점 늘어나서 이를 규정된 회기 내에 다 심의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가 지연되어 쌓이는 보고서 수가 증가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비준국 수가 183개국, 선택의정서 비준국은 78개국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밀려있는 60여개의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유엔 총회로부터 특별 예산을 배정받아 2006-2007년의 2년간은 기존 연2회 대신 연3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중 3번은 위원회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9) Human Rights Watch가 신설 인권이사회의 운영에 대해 낸 의견서, Human Rights Council: No More Business as Usual. Human Rights Council Extranet에 게재되어 있다.

10) Report of the Panel of Eminent Persons on United Nations-Civil Society Relations, We the peoples: civil society, the United Nations and global governance, A/58/817, 11 June 2004.

11) 7대 주요 국제인권협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다. 여기에 덧붙여 장애인권리협약과 강제실종자보호협약에 대한 수년간의 논의가 현재 거의 마무리 중이다.

12) 현재 유엔회원국 모두가 7개 협약 중 1개 이상, 75% 이상은 4개 이상의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고서 심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2002년 협약감시기구의 통합성을 높이고 모든 보고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¹³⁾ 인권고등판무관실은 나아가 7개의 협약감시기구도 통합하여 단일상설협약감시기구로 하자는 제안과 함께, 7개 인권협약감시기구 중 제네바의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사무지원을 받지 않고 뉴욕의 여성지위향상국의 지원을 받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판무관실의 통합 하에 들어올 것을 제안하였다.¹⁴⁾

금년 3월 판무관실은 단일상설협약감시기구 설치를 구체화한 안(concept paper)을 제안하였는데, 이 문서에서 분석한 현재의 인권협약감시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복잡하고 중복되는 보고서제출 의무, 협약기구들 간의 상이한 운영방식과 통합성 부족, 협약의 증가와 비준국의 증가로 인한 협약기구, 사무국의 업무증가 및 시간, 자원 부족과 이로 인한 보고서, 개인진정서 심의의 지연 등이다. 게다가 이러한 인권보장체제가 일반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언론도 잘 보도하지 않으며, 전문가위원들도 보수 없이 시간제여서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 고르지 않고, 심의 후 협약의 국내이행을 보장하는 후속장치가 없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 25명 정도로 구성되는 상설 단일협약기구를 제안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¹⁵⁾

각 협약감시기구는 2002년 아난 사무총장의 단일보고서 제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두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통합성을 높일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일보고서로 통합할 경우 각 인권협약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하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각국의 기본적 정치체제, 인권보호체제, 차별금지보장 등 인권협약에 공통되는 사항을 공통핵심문서(common core document)에 담고, 여기에 각 협약의 이행보고서(treaty-specific report)를 덧붙이는 방안이다. 무엇을 공통핵심문서에 담을 것인가 하는 것도 각 협약감시기구의 논의, 7개 위원회 대표자 회의, 의장단회의를 거쳐 올해 2월에 작성하였다.¹⁶⁾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에 인권고등판무관은 다시 단일 상설협약감시기구를 제안하고, 특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판무관실의 사무지원을 받을 것을 다시 요청하고 있다.

13) A/57/387, pp. 12-13.

14) The OHCHR Plan of Action, A/59/2005/Add. 3, 26 May 2005.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웹사이트를 볼 것. www.ohchr.org.

15) Concept Paper on the High Commissioner's Proposal for a Unified Standing Treaty Body, HRI/MC/2006/CRP.1, 14 March 2006.

16) 협약감시기구의 의장단 회의는 80년대 말부터 연 1회씩 개최하여 금년 6월에 18번째 회의를 하게 된다. 이에 덧붙여 2002년부터는 각 위원회에서 3명씩 참여하는 위원회 간 회의(Inter-Committee Meeting)를 연1회씩 개최하여 왔다. 필자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던 2003년 위원회 간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인권의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2가지이다. 단일 상설협약감시기구가 과연 여성의 인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유엔본부의 여성지위향상국의 사무지원을 받다가 인권고등판무관실로 옮기는 것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인권고등판무관과의 대화¹⁷⁾ 및 위원회 내부 논의 끝에 상설 단일협약감시기구의 설립이 바람직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협약감시기구간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을 금년 5월에 열렸던 제35차 회기에서 채택하였다.¹⁸⁾ 인권고등판무관은 양성평등이 인권논의의 핵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누차 강조하였지만, 단일기구로 될 경우 양성평등 문제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우려에서이다.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뉴욕의 사무총장 여성문제특별보좌관실, 여성지위위원회, 여성NGO들과 지금까지 유지해 온 긴밀한 연계성, 여성지위향상국이 제공해 온 높은 수준의 사무적 지원을 제네바의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에서 제네바로 옮기기를 주저하고 있다. 여성협약과 관련한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온 IWRAW-Asia Pacific도 이에 대해 여성인권문제의 특수성 유지, NGO의 참여 강화, 여성인권문제의 주변화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각 협약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각국이 어떻게 협약을 잘 지켜서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약감시기구뿐 아니라 협약 당사국 정부, 국가인권기구, 여성단체 등 광범위하게 의견이 수렴되어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결정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¹⁹⁾

3. 유엔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계의 대응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올해 2월 고위급 인사 15명으로 유엔 전 시스템을 망라해서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패넬을 구성하고, 2005년 밀레니엄 평가 정상

17)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5. 1.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파견된 실무자와 인권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34차 위원회 회기 중 2006. 1. 27. 오전에는 루이스 아버 판무관이 직접 참석하여 2시간 30분에 걸친 논의를 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이를 정리하여 아버 판무관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판무관은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 답신을 보내왔다.

18)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owards a harmonized and integrated human rights treaty bodies system", 35th session, 15 May-2 June 2006. CEDAW (www.un.org/womenwatch/daw/cedaw/35sess.htm)에서 statements 항목을 볼 것.

19) 협약감시기구의 통합은 각 협약의 개정, 또는 각 협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선택의정서의 채택 등 협약 당사국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제네바로 옮기는 문제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개발, 인도적 지원 및 환경 분야에서 유엔시스템이 어떻게 더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임무를 이 패널에 부여하였다.²⁰⁾ 동 패널은 올 여름까지는 작업을 마치고 9월 유엔총회에 정식으로 권고안을 제출, 2007년 실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High-level Panel on UN System-Wide Coherence (이하 Coherence panel) 임명 이후 여성계는 3월 제50차 여성지위위원회 기간 동안 유엔개혁에 대한 여성계의 의견을 분출하였다. 유엔개혁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²¹⁾에 이어,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한 NGO참가자 240명의 서명을 받아 사무총장과 회원국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²²⁾을 3월 6일 발표하였다. 유엔 개혁과정에 양성평등 문제와 여성관련 기관이 언급되지도 않고 Coherence panel의 15인중 여성이 3명밖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유엔 고위직에 여전히 여성이 소수인 점 등 여성계의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연달아 4월에는 Coherence panel 위원들에게 여성관련 기구와 성 주류화의 문제를 패널의 임무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3개 국제여성단체 대표명의로 발송하였다.²³⁾ 이어 5월 3일에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여성계 대표들이 만나 유엔 개혁과정에서 유엔시스템 내에 여성기구와 성 주류화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양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아난 총장은 독립적 여성기구를 신설하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구조를 강화하고 양성평등, 성 주류화의 강화, 사무차장의 임명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⁴⁾ 동시에 유엔 모든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문제담당관(gender focal point)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여성들의 의견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여성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Coherence panel은 유엔 개혁에 있어 여성기구 강화와 양성평등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건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현재까지 논

20) 지금까지의 다른 고위급 패널과는 달리 노르웨이, 파키스탄, 모잠비크의 현직 총리 3명을 공동의장으로 해서 모두 현직에 있는 실세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위원 15명의 명단과 추진일정은 www.un.org/reform 에서 2006: UN System-Wide Coherence를 참조할 것.

21) “UN Reform: What’s in it for Women?,” Heinrich Boell Foundation,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er 주최(2006.3.1). www.boell.org/news/documents/UNReform_Gender_Boell_IWTC_Summary1.pdf에서 요약문을 참조할 것.

22) 이 공개서한은 www.cwgl.rutgers.edu/globalcenter/policy/csw06/un_reform_open_letter.pdf을 참고할 것.

23) 3개 단체는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CWGL), Women’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WEDO),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WILPF)이다. www.cwgl.rutgers.edu/globalcenter/policy/unadvocacy/index.html에서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 Statements 중 April 7, 2006: Advocates Call for UN Reform to Include A Needs Assessment of Women’s Machineries를 클릭할 것.

24) Briefing Note on Women’s Rights and the “Coherence Panel” in the UN Reform Process, May 8, 2006. www.cwgl.rutgers.edu/globalcenter/policy/unadvocacy/index.html를 볼 것.

의된 흐름은 사무총장 여성문제특별보좌관실(OSAGI), 여성지위향상국(DAW), 여성개발기금(UNIFEM),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RAW) 등의 기구를 하나로 묶어 초대형 기구를 만들기 보다는 각 기구의 권한과 재정을 강화하고 기구사이의 통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각국과 지역 차원의 유엔기구의 활동에도 성 주류화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Coherence panel과 관련 있는 것이 Mandate review(유엔 결의안의 전면적 재검토)이다. 역시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의 결의에 의해²⁵⁾ 유엔은 지금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보리의 결의 중 5년 이상 된 모든 결정(mandate)도 재검토하여 축소, 통합, 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²⁶⁾ 과도한 보고서발간의 부담, 업무의 중복을 초래하는 결정, 결정을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구조,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인식에서 연 수백여 개씩 채택되는 mandate를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²⁷⁾ 주제별로 분야를 나누어 국제평화와 안보, 지속가능발전, 아프리카개발, 인권증진, 인도적 지원, 정의와 국제법, 군축, 마약·범죄예방·테러, 양성평등 및 여성의 세력화, 그리고 연구 및 훈련기관의 10개로 분류하였다. 양성평등 및 여성 세력화 분야는 환경, 평화구축, 인권과 마찬가지로 전 분야를 관통하는 주제(cross-cutting issue)로 간주되고 있다. 이 과정은 양성평등 분야 자체의 Mandate review²⁸⁾와 함께,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한국여성계의 과제

지금까지 유엔은 국가 간 기구로서 국제적 기준을 새로 만들어내고 또 동시에 유엔 회원국들은 그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임무가 있다는 원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성인권분야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으로서, 또 북경행동강령은 정책문서로서 국제적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성협약과 북경행동강령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과 여성에 대한 차별금

25) 2005 World Summit Outcome, A/RES/60/1, 24 October 2005.

26) Mandating and delivering: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to facilitate the review of mandates, A/60/733, 30 March 2006.

27) Mandate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 실천이 필요한 것, 기구에 관한 것. mandates의 목록은 www.un.org/mandatereview를 볼 것.

28) 지적된 문제로는 여성의 지위에 관한 정기 보고서가 여성지위위원회, 총회 제3위원회, 인권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 등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 과잉의 문제, 또 인신매매, 여성에게 위대한 전통적 관습,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명예범죄 등에 대한 보고서는 여성폭력의 범주로 한데 묶을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고,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모든 관련기관들이 하도록 한 결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 등이 지적되었다.

지 및 여성인권보장, 그리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성 주류화와 50:50의 여성대표성이다.

유엔의 모든 개혁과정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러한 원칙의 적용을 요구해야 한다. 우선은 한국정부에게 여성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정부가 유엔의 개혁논의에 참여할 때 여성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많지는 않지만 UNDP, UNHCR 한국사무소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가 성 주류화의 관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특히 새로 가동되는 인권이사회에는 한국의 NGO와 더불어 여성들도 될 수 있으면 직접 참여하면 좋겠다. 새로운 인권시스템의 구축은 앞으로의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심의가 있을 때²⁹⁾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인권의 국제적 기준이 국내에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차별철폐협약, 북경행동강령, 밀레니엄개발목표, 더반선언, AIDS선언 등과 더불어 장애여성, 이주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 그동안 세워진 국제적 기준이 한국의 법과 정책, 프로그램에 적용되도록 열심히 정부의 정책을 모니터하고 요구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9)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권이사회의 국별 정기심의는 우선 임기 1년의 국가부터 시작될 전망이 크다. 초대 이사국 선출 후 임기를 정하는 의장의 제비뽑기에서 한국은 임기가 2년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심의는 2008년 6월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7개 초대 이사국 중 임기 1년 이사국은 14개국, 2년은 15개국, 3년은 18개국이다.